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론들

- 부실 기업 정리를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최근에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
-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

< 최근 주가지수 및 환율 추이 >

	4월 30일	5월 14일
주가지수	421.22	362.94
환율	1335.2	1415.0

-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에 따르는 대량 부도 사태가 날 것을 염려하는 자금 관리로 인해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
 - 구조조정 추이를 보고 더욱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관망적인 심리로 인해 기업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으며,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최근 무디스社가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고 기업들의 추가적인 채권 발행이 차질을 빚고 있음
 - 외국인 투자자들도 구조조정 이후로 투자 시점을 연기하고 있어서 외자 유치와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
-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간의 의견 통일이 결여되어 있음
 - 정부의 정책은 며칠이 가지 못한 채 번복되어 혼란이 가중됨
 - 그 결과 각 경제 주체들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임

-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보다는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왔음
 - 정부의 정책은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관리·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
 - 일부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경제 위기의 원인인 금융 부문이 먼저 구조조정되어야 구조 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
- 금융기관에서는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5월말까지 부실기업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다고 여기고 있음
 - 정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후유증이 없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동원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
 - 정부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기업 처리 방안의 금융기관 공동 작성을 금지하고 있어, 기업 평가 능력이 다소 부족한 금융기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
 - 또한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처리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여기는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

< 구조조정 추진 일정과 정리 대상 기업 선정 기준 >

<p>■ 금융감독위원회의 제1차 기업 구조조정 추진 일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은행별 「부실기업판정위원회」 설치 (5월 초)- 은행별 부실기업 현황 파악 (5월 말)- 부실기업 정리 및 퇴출 시작 (6월 이후)- 1차 구조조정 완료 (9월 말) <p>■ 정리 대상 부실기업 선정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미래의 생존 가능성- 外資 유치 실현 가능성- 所有主의 소유권 포기 가능성-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
--

(정 반 석 bsjung@hri.co.kr ☎724-4045)